푸틴 집권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실용적 현실주의의 이중성*

임 경 훈**

"수십 년간 우리에게 유럽은
필요하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는
그들로부터 등을 돌려야만 한다."
- 피터 대제[1)]

1. 서론

푸틴(Vladimir Putin)의 권력 공고화, 경제사정 호전 및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 제고에 따라 러시아가 예전에 비해 비교적 예측 가능한 방향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대립된 평가가 있다. 하나는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외교노선이 옐친 시기의 비현실적인 다극화전략을 탈피하여 전반적으로 친서방적인 것으로 전환했다는 관찰이다. 이러한 관찰을 하는 학자 중 일부는 러시아가 보다 민주적인 국가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방에 더욱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1)] 다른 하나는 푸틴 정부도 러시아의 전통적인 '제국화'를 지

---

* 날카롭고도 자세한 평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자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1) Angela E. Stent(2005) "America and Russia: Paradoxes of Partnership," *Russia's Engagement with the West: Transformation and Integr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Alexander J. Motyl et al. eds., Armonk: M. E. Sharpe, p. 270에서 재인용.

2) Dmitri Trenin(2001) *The End of Eurasia: Russia on the Border between Geopolitics and Globalization*, Moscow: Carnegie Moscow Center; Robert Levgold(Winter 2002-2003) "All the Way," *The National Interest*, vol. 70, pp. 21-31; Richard Sakwa(2004) *Putin: Russia's Choice*, London: Routeledge; Margot Light(2003) "In Search of an Identity: Russian Foreign Policy and the End of Ideology,"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vol.

향하고 있을 뿐이며, 특히 최근 노골화되는 권위주의화 경향은 러시아가 서방과는 다른 정체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 이러한 주장은 러시아 엘리트, 특히 군사, 외교 엘리트 사이에서 친서방, 특히 친미노선에 대한 의구심이 광범하게 공유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논문은 푸틴 집권기 러시아 대외정책의 성격을 이처럼 이분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푸틴의 외교노선은 명실상부한 '강대국(great power)' 재건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이 두 가지 경향 모두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면 곧 제국을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하거나 또는 강대국 지위를 재건하려는 시도를 반서방적 노선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러시아 외교의 '이중성'은 찌간코프(Andrei P. Tsygankov)나 로(Bobo Lo)에 의해서도 관찰된 바 있다.[4] 그러나 이들은 푸틴 외교가 서방과의 관계에서 현실주의적 순응 및 협력, 경제 우선 노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더 강조하고 있는 반면, 근외지역(近外地域; 'Near Abroad')에서 러시아가 실제로 구사하고 있는 전략이 '공세적', '강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과소평가하고 있다. 푸틴 외교가 '전방위적 협력관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들 중 일부도[5] 러시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변 국가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푸틴 외교에 대한 이러한 평가의 차이는 푸틴 외교가 지향하는 '강대국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푸틴의 현실주의적, 실용주의적 외교가 지역에 따라 상반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푸틴의 실용주의 외교가 지닌 이중성은 서방

19, no. 3, pp. 42-59.

3) Janusz Bugajski(Winter 2003-2004) "Russia's New Europe," *National Interests*, vol. 71, pp. 84-91; Stephen J. Blank(Winter 2002) "Putin's Twelve-Step Program," *The Washington Quarterly*, pp. 147-160.

4) Andrei P. Tsygankov(2005) "Vladimir Putin's Vision of Russia as a Normal Great Power," *Post-Soviet Affairs*, vol. 21, no. 2, pp. 132-158; Bobo Lo(2003) *Vladimir Putin and the Evolution of Russian Foreign Policy*, London: Blackwell Publishers.

5) 고상두(2005) 「푸틴의 전방위 외교정책: 제국증후군의 극복」,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1호, pp. 347-364.

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6] 그러한 이중성은 서방과 근외지역에 대한 그의 외교정책을 비교할 때 더욱 극명하게 관찰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몰도바 등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은 분명히 단순히 '실용주의적', '정상적(normal)'이라기보다는 CIS 내에서의 헤게모니 공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CIS 내에서의 영향력 확보가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가장 긴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리고 푸틴의 집권 2기에 접어들어서 러시아 외교는 에너지 자원을 지렛대로 하여 더욱 공세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외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헤게모니 추구와 친서방 실용주의라는 이원화된 전략은 그 나름의 일정한 딜레마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에서는 푸틴 외교노선 형성의 역사적 배경, 특히 90년대의 경험을 고찰함으로써 실용적 현실주의 노선의 기본 골격을 제시한다. 제3절과 제4절은 서방과 근외지역에 대해 차별적으로 전개되는 푸틴의 외교노선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5절 결론에서는 이중적 외교전략이 지니는 딜레마와 의의를 평가한다.

2. 실용적 현실주의 노선의 형성 배경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이익 및 정체성을 새로이 규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옐친 시기의 외교적 불안정서는 친서방 일변도 노선과 전통적 유라시아주의 사이의 충돌, 전통적 세계질서관념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는 국력의 쇠퇴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푸틴의 외교정책은 이러한 90년대 러시아 외교의 뼈아픈 좌절 속에서 진화되어 온 것으로서, 옐친 시기의 외교노선과 비교할 때 연속성과 변화라는 두 측면 모두를 지니고 있다.

옐친 집권 초기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러시아와 서구의 이해관계 차이에 주목하면서도 공통의 이해와 민주적 가치 공유를 중시하였다. 미국 및 나토와의 협력이 강조되었으며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의 정치, 경제 발전에 이해를 갖고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옐친 집권 중반 이후 러시아 외교는

6) 강봉구(2005) 「편승과 균형: 21세기 세계정치와 러-미 관계」, 『국제정치논총』, 제 45집, 3호, pp. 263-285.

경제 영역에서는 대서방 의존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안보, 지정학적 의제가 그 핵심을 이루었다. 그리고 지정학적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러시아는 친서방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코지레프 외상 시절부터 이미 반서방적 정향을 띠기 시작했다. 특히 1993년 12월 의회 선거 이후 러시아 외교의 초점은 CIS 내 영향력 공고화 및 강대국 지위 확보 문제로 이동하였다.[7] 그 결과 9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 외교는 국제질서에 대한 제로-섬적 이해, 세력균형 및 영향권(sphere of influence) 확보에 대한 강조 등 기존의 관성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프리마코프 노선에 의하여 더욱 체계화되었다. 1997년 '국가안보개념(National Security Concept)'은 프리마코프의 노선이 관철되어 러시아의 유라시아적 정체성이 부각되어 있으며 서방과의 '동등한' 협력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서구는 부정적 존재로 인식되었고, 나토(NATO)의 확대 및 나토가 유럽에서 가장 지배적인 정치, 군사 조직이 되는 경향이 새로운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프리마코프는 러시아가 서구와는 지정학적, 문화적으로 구별되며 다극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한 극을 담당하는 균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독립한 구소련 공화국들을 CIS의 틀 속에서 재통합하고, 나토의 동진을 강력히 저지해야 하며,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이란 등과의 군사협력 강화 및 러시아-중국-인도를 잇는 동맹 축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

푸틴도 집권 초기에는 이러한 프리마코프식의 지정학적 사고 및 국가주의적 세계관의 틀을 계승하였다. 특히 2000년 1월 발표된 국가안보개념과 4월의 군사독트린에는 프리마코프 노선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유라시아적 지정학적 위치로부터 기인하는 균형 외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들 문서는 러시아의 경제적 취약성 및 대외의존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세계질서에서 러시아가 명실상부하게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것과 유엔,

---

7) Allen C. Lynch(2001) "The Realism of Russia's Foreign Policy," *Europe-Asia Studies*, vol. 53, no. 1, pp. 7-31.

8) 그러나 프리마코프의 세력균형 노선도 반서방적 레토릭과 달리 러시아가 처한 대외의존적 한계로 인해 실용주의적 색채를 띨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Jeffrey Surovell(2005) "Yevgenii Primakov: 'Hard-Liner' or Casualty of the Conventional Wisdom?"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vol. 21, no. 2, pp. 223-247.

G-8 등 세계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문건은 여전히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배 하의 단극적 세계질서와 나토의 확대를 위협의 원천으로 간주하였으며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있다.[9] 뿐만 아니라 이들 문서는 유사시 러시아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을 천명하기까지 하였다. 취임 초 푸틴 자신도 중국, 북한, 쿠바 등을 우선적으로 방문하는 등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모색한 바 있다. 초기 푸틴의 이러한 행보는 러시아 엘리트들의 애국주의적, 반서방적 정서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푸틴은 곧 프리마코프 노선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그러한 차이는 특히 지정학적, 전략적 사고 틀의 변화와 외교에 있어서 경제 우선성에 대한 그의 강조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 6월에 발표된 '신외교개념'에 이미 표출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옐친정권은 제로-섬, 세력균형, 세력권 등의 개념 틀에 집착하였고, 나토 확대, 코소보, 미국의 전략 미사일 방어 등 지정학적 의제가 외교의 핵심을 차지하였다. 유럽연합이나 APEC 등과의 협력도 지정학적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유럽연합과의 협력, WTO 가입, 카스피해 개발 문제 등에서 그 성과가 지지부진하였다. 이와 달리 푸틴은 국제현실을 단순히 제로-섬적인 것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미국에 대한 세력균형 행위가 오히려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추락과 외교적 고립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푸틴 외교의 실리추구적 성격은 '제국증후군' 탈피와 경제 우선 원칙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푸틴은 러시아의 국가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외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군사적, 지정학적 고려보다 실용주의적, 지경학적 판단을 중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정학과 지경학을 분리시키기는 어렵지만, 푸틴의 이러한 입장은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취했던 프리마코프와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옐친 시기 친서방적 경제노선이 주로 경제개혁과 관련된 것이라면 푸틴 시기에는 세계경제에의 통합과 러시아 기업들의 구체적 이익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푸틴

9) 90년대 이후 러시아 대외정책의 주요문건들에 대한 해설로는 Alla Kassianova(2001) "Russia: Still Open to the West? Evolution of the State Identity in the Foreign Policy and Security Discourse," *Europe-Asia Studies*, vol. 53, no. 6, pp. 821-839 참조.

집권 이후 러시아는 원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자원을 실리추구의 대표적 원천이자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요컨대 푸틴의 외교노선은 '실용적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교노선의 목표는 옐친 정부 기간 동안 서방에 '위협'도 '친구'도 아닌, '무시'의 대상이 된 현실을 타개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명실상부한 '강대국'을 재건하는 것이다. 그런데 푸틴은 이러한 '강대국화'를 국가의 목표라기보다는 국가 생존을 위한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다.[10] 그리고 강대국화를 위해 푸틴은 한편으로는 미국 등 G-7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방위적 외교'를 추구하되, 우선적으로는 이른바 근외지역에서 영향력을 공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냉엄한 현실주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서구와의 파트너쉽을 추구하되, 친서방/반서방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비서방적 정체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 개인의 인식이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그의 이러한 외교노선은 군사, 외교, 경제 엘리트층의 인식이 90년대 후반 이후 폭넓게 결합되어 온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11]

3. 푸틴정부의 대서방 외교

푸틴은 집권 이후 빠른 속도로 미국 및 나토의 압도적 힘의 우위에 순응하고 유럽연합 및 주요 개별 유럽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실용주의로 전환하였다. 특히 9/11은 푸틴의 대서방 정책이 결정적으로 전환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필자도 그러한 관찰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러시아-서방의 협력관계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푸틴의 대통령 취임 초까지, 즉 클린턴 행정부 임기 후반 동안,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구소련 붕괴 이후 가장 악화된 상태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러시아-나토 관계, G-7과의 관계, 러시아의 WTO 가입 등의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해 대체로 관여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클린턴 2기에 들어

10) Vladimir Putin(2003. 5. 16) "Poslanije Prezidenta Federal'nomu Sobraniju Rossijskoj Federatsii," http://president.kremlin.ru.

11) 그 대표적 예로는 Sovet po vneshnej i oboronnoi politike(1998) "Strategija Rossii v XXI veke: analiz situatsii i nekotorye predlozhenija," http://www.svop.ru.

서 국력 쇠퇴가 명확해진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부차적인 것으로 변화했고, 그 대신 나토, 코소보, 중동 문제가 더 중요하게 부상하였다. 러시아는 미국의 ABM 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 of 1972) 폐기 의사,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러시아 책임 문제 거론 등에 대해 반발하였다. 더구나 1997년 동구 국가들의 나토 가입 결정에 이어 1999년 코소보 사태로 인한 나토의 일방적 세르비아 공습까지 발생하자 러시아와 미국 및 서유럽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푸틴이 최종 승인한 2000년 외교정책 개념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나 러시아의 서방기구에로의 통합의 중요성이 특별히 부각되지 않고 있다. 다만 1999년 후반부터 러시아 정부의 반미적 언급은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 조짐은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 악화가 러시아에게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본격적인 관계 개선은 클린턴 행정부 이후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푸틴은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1995년의 이른바 '고어-체르노미르딘 협약'을 폐기하여 대선 과정에서 고어 후보에 타격을 주기까지 하였다.

부시 행정부 초반까지도 양국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결구도였다. 현실주의적 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던 부시 진영은 이미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대러시아 정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는 러시아 국력 쇠퇴를 고려할 때 클린턴 행정부 시절처럼 러시아를 굳이 특별히 대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일종의 러시아에 대한 '무관심' 또는 '경시' 태도를 취하였다.[12]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러시아 핵 기술 이전 문제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대결적 자세를 견지하고, 기존의 무기통제 협약들을 재검토할 것과 함께 ABM 조약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폐기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미국 외교관에 대한 보복추방과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 재개, 리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 이라크와 적극적 경협, 인도 및 중국과의 교역 확대, 세력균형을 위한 러-중 선린우호협력 조약 체결, 중국 핵 발전 건설 참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푸틴은 일방적으로 군사무기의 감축 및 쿠바와 베트남의 정보수집 기지 폐쇄 등

12) James M. Goldgeier & Michael McFaul(2003) *Power and Purpose: US Policy toward Russia after the Cold Wa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pp. 305-313.

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에게 관계 개선 희망 의사를 내비치고 있었다.

이 기간 푸틴 외교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핵 안정의 초석'으로 간주되던 ABM 조약의 유지였다. 이를 위해 푸틴은 취임 초 두마를 설득하여 START II(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II)에 대한 두마 비준을 이끌어냈고, 또 미 상원이 비준을 하지 않고 있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에 대해서도 두마가 비준토록 했다. 더 나아가 푸틴은 2000년 11월 양국의 핵탄두를 1500개 이하로 급격히 줄이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조치나 제안의 궁극적 목표는 오직 ABM 조약의 유지였다. 아울러 러시아는 이른바 불량 국가와 ABM 조약 유지를 원하는 유럽 국가들을 설득하고 UN 총회의 지지 결의안까지 이끌어 내었다. 러시아는 이러한 국제적 여론 조성과 함께, 세력균형을 위해 중국, 북한, 이라크, 인도, 리비아, 쿠바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푸틴은 ABM 조약의 유지를 통해 국내 엘리트들에게 자신의 리더쉽을 더욱 각인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푸틴의 이러한 노력은 2001년 부시 정부가 ABM 폐기를 일방적으로 공식화함으로써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푸틴은 세계적 무기 통제 체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미에서 부시 정부의 '실수'라고 비판은 하였지만 더 이상의 반발은 보이지 않았다. 부시 정부는 이러한 푸틴의 묵인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지는 않았다. 옐친 집권기 러시아 정부는 실질적 정책수단이 없으면서도 미국 및 나토에 강하게 반발함으로써 오히려 국제적 위신이 추락한 경험을 반복한 바 있다. 푸틴의 ABM 조약 폐기에 대한 순응은 러시아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한 가장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9/11 테러는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푸틴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푸틴은 국가안보위원회를 포함한 정부부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미국에 적극적 협력을 제안하였다. 푸틴은 9/11 이후 세계질서 속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전략적 이해를 공유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협력으로 미국에게 테러집단과 관련한 정보 제공, 구조 활동에 필요한 러시아 영공 개방, 아프가니스탄의 북부동맹에 대한 무기지원 등과 함께,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미군기지가 설치되는 것을 묵인하였다. 러시아는 90년대 이래 탈레반을 위협으로 간주해 왔고 체첸 반군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해 온 바 있다. 이러한 러시아에게 9/11은 자신의 명분을

서방에 확인시키고 대체첸 전쟁에 대한 서방의 비판을 누그러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으로서도 러시아의 경제적 취약성이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테러집단 발흥 및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 요인이 된다는 인식을 다시 하게 되었다. 또한 중동 불안에 따라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하였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러시아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부시 정부는 푸틴 정부의 협조에 대해 러시아의 WTO 가입 지원, 냉전 시 러시아와의 교역을 제한해 온 법률(즉, Jackson-Vanik 법안) 폐기, 에너지 및 경제 협력 등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미-러 관계의 개선은 양측 모두 지극히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윌슨주의적 성향을 지녔던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부시 행정부는 현실주의적(Realpolitik) 정치관으로부터 체첸, 언론, 인권 문제 등 러시아 국내 문제와 관련된 특별한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 협력의 현실주의적 기초는 곧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13]

사실 푸틴 정부는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라크, 이란 등 미국의 적대국과도 협력해 왔다. 이러한 전략은 양측간의 긴장이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는 조건에서 실리추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라크 사태 악화는 이러한 전략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러시아는 80억 불 정도로 추산되는 부채회수 및 유전개발과 관련된 러시아 기업들의 권리 등 이라크에 대해 구체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일하게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라크 사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푸틴은 프랑스 및 독일과 이라크 전쟁 반대 공동전선을 형성하였다. 그러면서도 푸틴 정부는 후세인 제거 이후에도 러시아의 이익이 보장된다면 미국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14] 막상 미국은 러시아의 반대에 크게 개의치 않았고 러시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고위급 노력도 하지 않았다. 미국의 일방주의가 완고하게 지속되자 러시아의 양다리 걸치기는 결국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15]

---

13) Celeste A. Wallander(October 2003) "US-Russian Relations: Between Realism and Reality," *Current History,* vol. 102, no. 666, pp. 307-312; Angela E. Stent(2005), pp. 269-270.

14) Mark N. Katz(October 2003) "Losing Balance: Russian Foreign Policy toward Iraq and Iran," *Current History,* vol. 102, no. 666, pp. 341-343.

다른 한편, 9/11 사태는 러시아가 나토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나토의 관계 회복 역시 제도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제한적 연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나토는 러시아를 여전히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1995년 8-9월 나토의 세르비아 폭격은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지역에서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다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토는 러시아를 배제하기보다 통합하려는 노력을 보여 1997년 5월 나토는 러시아와 협약(The Founding Act on Mutual Relations, Cooperation and Security)을 맺고 상설공동위원회(Permanent Joint Council)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양자 관계는 발칸 사태로 인해 계속 저조하였다.

러시아는 군사적 측면에서 대규모 위협이 없다 하더라도 나토 확대가 가장 위협적 요인이라고 인식하였다. 나토 확대는 러시아에게 실질적이고 분명한 위협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취약성 및 유럽으로부터의 고립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1999년 3월 나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세르비아를 공습하였는데, 이는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협력이 상징적일 뿐이며 러시아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곧이어 나토는 창설 50주년을 맞아 탈냉전 이후 두 번째인 '신전략개념(New Strategic Concept)'을 발표하였는데, '신전략개념'은 나토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갈등확산 위험 및 나토의 위기관리 역할을 강조하고 동맹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위기대응 차원에서 동맹군의 작전(이른바 non-Article 5 operations)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러시아는 코소보 사태에 대한 나토 및 미국의 일방적 개입 그리고 나토의 역할 및 행동반경 확대가 러시아 국내 상황(예를 들어, 체첸 문제)이나 러시아가 전통적 이해관계를 지닌 근외지역에 대한 외부개입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여 강력히 반발하였다. 러시아의 2000년 국가안보 개념이 나토확대 및 러시아 국경 근처의 외국군사기지 문제를 근본적 위협 요인으로 규정한 데에는 나토에 대한 이러한 의구심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푸틴은 ABM 조약 폐기 때와 마찬가지로 나토의 2차 확대에도 대체로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9/11 이후 나토는 테러와의 전쟁, MD

15) 러시아의 반대가 프랑스나 독일과 달리 상대적으로 덜 강경했고 경제적 이익에 기초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는 점을 부시 정부가 이해함에 따라 2003년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회복되었다. 이를 두고 혹자는 푸틴이 "용서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Celeste A. Wallander(October 2003), p. 309.

에 대한 푸틴의 묵인 및 ABM 조약 폐기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 보상으로 러시아와 보다 제도화된 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2년 5월 나토-러시아 공동위원회(NATO-Russia Council)가 기존의 상설공동위원회를 대체하게 되었다. 나토-러시아 공동위원회는 테러와의 전쟁, 위기관리,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평화유지, 방위부문 개혁, 수색 및 구조, TMD 구축 등 광범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나토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러시아가 비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특히 새로 나토에 편입된 동구 국가들은 러시아에게 일정한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여 왔다.

표면적으로 푸틴은 나토가 유럽의 유일한 안보기구라는 점과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나토가 유럽 안보를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 나토 확대에 대한 묵인도 나토가 궁극적으로 군사기구에서 정치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 대신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유럽 집단안보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16], 유럽연합의 '유럽안보방위구상(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신속대응군 체제가 나토와 균형을 맞추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나토에 대한 푸틴 정부의 기본인식도 전통적 관념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으며, 단지 현실주의적 순응의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러시아 국내에서도 나토는 여전히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며[17] 이러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나토에 파견되었던 장교들이 귀국 후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기까지 하다. 그리고 러시아를 서방기구에 편입시키는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전략적 환경 변화, 예를 들어 유럽안보방위구상과 나토개혁 문제 등에서 러시아는 실질적으로는 배제되고 있다.[18] 요컨대, 현재로서 러시아와 나토는 상징적 협력 수준의 제한적 연계를 맺고 있을 뿐이다.

---

16) Igor S. Ivanov(2002) *The New Russian Diplomacy*, Washington, D.C.: The Nixon Center and Brookings Institution Press, pp. 96-98.

17) A. I. Burkin, A. V. Vozzhenikov & N. V. Sineok(2005) *Natsional'naja bezopasnost' Rossii*, Moskva: Izdatel'stvo RAGS, p. 243; William D. Jackson(2002) "Encircled Again: Russia's Military Assesses Threats in a Post-Soviet World,"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7, no. 3.

18) Sophia Clement-Noguier(2005) "Russia, the European Union, and NATO after September 11: Challenges and Limits of a New Entanglement," *Russia's Engagement with the West*, pp. 238-259.

나토와 달리 유럽연합은 러시아에게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고, 그 확대도 덜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미국과의 교역이 러시아 총 무역액의 5% 미만이고, 러시아 교역에서 CIS 국가들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유럽연합은 러시아 원유의 50% 이상, 가스의 60%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국제 교역 중 5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러시아는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한 국외자가 아니며, 그 관계 또한 나토와의 관계보다 더 제도화되어 있다. 러시아를 유럽의 일원으로 규정하는 푸틴 정부는 투자유치, WTO 가입 문제, 에너지 협력 등을 중심으로 유럽연합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유무역 및 관세동맹, 궁극적으로는 단일경제지역 형성을 희망한다는 의사까지 피력한 바 있다.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와 유럽연합은 유럽-대서양 지역에서 다자주의적 안보체제를 발전시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냉전 이후 여러 주요 문제들 -- 예를 들어, 쿄토 의정서, 사형제, 군비 지출, 신자유주의, 유엔 역할 강화, 테러와의 전쟁 및 이라크전 등 --에 대해 미국과 중요한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이런 점에서 유럽연합은 러시아에게 유엔 기능을 회복시키고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중요한 통로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미국 주도의 나토에 대응하여 안보체제를 책임지기를 희망한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이미 마케도니아, 보스니아에서 나토 평화유지기능을 인수한 바 있고, 독자적으로 '유럽안보방위구상' 및 신속대응군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보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역할이나 러시아-유럽연합의 협력 관계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안보방위구상'의 경우가 잘 보여주고 있다. 유럽안보방위구상이 유럽대륙에서의 위기관리 역할을 강화하고는 있고, 장차 나토가 누리는 독점적 지위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여전히 취약하고 참여국들 간의 이견도 많다. 또한 유럽안보방위구상의 활동 범위나 운영방식 (예를 들어, 독자적 운영 여부, 나토/미국과의 자원 공유 또는 연합 여부 등)이 분명하게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 문제의 처리 여하에 따라서는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권 침해 문제 등이 제기될 수도 있다.[19]

그리고 경제외교 영역에서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해 포용적인 것만은 아

니다. 러시아로서는 시장경제 인정 및 WTO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다양한 구성원을 지닌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쉽지는 않다. 유럽연합은 WTO 가입 지원 조건으로 국내 에너지 가격인상, 관세인하, 농업보조금 폐지, 금융시장 및 통신시장 개방, 각종 구조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계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국내 에너지 가격에 대해 유럽연합 국가들이 보조금 지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2002년 러시아를 시장경제로 인정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반덤핑 입법조치와 보호무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철강 등 금속과 화학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섬유, 의류 수출에 대해서는 쿼터를 설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교토 협약 비준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러시아에 대해 교토 협약 비준 여부를 WTO 가입 지원 조건으로 내세운 바도 있다.[20] 요컨대, 러시아-유럽연합의 경제관계는 일련의 공동체 규약(acquis communautaire)을 브뤼셀이 부과하고 러시아가 이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21]

유럽연합 확대로 인해 발생한 러시아인들의 칼리닌그라드 왕래 문제에 있어서도 유럽연합은 푸틴이 강력히 요구한 무비자 왕래 허용을 거부하고 '간소화된 여행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미국보다도 러시아 국내 정치상황, 러시아의 근외지역 외교에 대해 훨씬 비판적이다. 아울러 이라크전 당시 확인된 유럽연합 내의 분열, 즉 구유럽(독일, 프랑스 등)과 신유럽(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동구 신회원국 등)의 분열은 러시아로 하여금 어느 유럽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고민까지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브뤼셀보다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자 하는 프랑스, 가스 에너지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독일과의 개별적 협력을

19) Sophia Clement-Noguier(2005), pp. 248-253.

20) 유럽연합의 이러한 압박은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비준을 조건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매입해주도록 요구한데 대한 대응이었다. 이와 관련한 러시아의 외교적 실패에 관해서는 Mark N. Katz(October 2004) "Exploiting Rivalries: Putin's Foreign Policy," *Current History,* vol. 103, no. 675, pp. 339-340.

21) Philip Hanson(2005) "Making a Good Entrance: Russia's Reengagement with the World Economy and, Unfortunately, with Europe in Particular," *Russia's Engagement with the West*, pp. 125-131.

더욱 중시하고 있다.

이처럼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는 미국 및 서방과의 경제적 관계에서는 협력 및 세계경제에의 통합을 추구하는 한편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현실주의의 기초에서 순응 또는 제한적 협력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푸틴은 서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 또는 독자적 균형행위를 지양하고 외교적 고립을 회피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적 친서방 정책이 곧 러시아의 정체성 변화 및 서방으로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푸틴은 특히 서방과의 우호관계가 정치적 자유, 인권, 체첸 문제 등 러시아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푸틴 정부의 근외정책

CIS 지역은 옐친 정부 시절부터 러시아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차지해 왔다. 러시아는 이미 90년대 중반 나토 확대로 인해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부터 CIS 지역을 사활적 이해가 걸린 지역으로 규정한 바 있다. 프리마코프는 CIS의 틀 내에서의 구소련 공화국들의 재통합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실질적 수단을 결여한,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었고, 실제로 러시아의 90년대 정책은 서방 침투에 대한 소극적, 방어적 성격이 강하였다. 이에 반해 푸틴은 근외지역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러한 개입은 CIS를 통해 구소련 공화국들을 통합하려던 프리마코프 방식이 아니라 선택적 통합 및 경제적 수단과 이익이 보다 중시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푸틴 정부의 근외지역 정책에 대해서도 방어적이라거나 '정상화' 정도로 파악하는 견해들도 있다. 트레닌(Dmitri Trenin)은 푸틴 정권의 근외지역에 대한 관여정책이 영토적 야심이 아니라 기업들에 의한 구체적 이익 추구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통합 범위도 일부 국가(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 정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CIS 역내에서 러시아의 일정한 후퇴가 불가피하고 오히려 그것이 서구와 통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22] 찌간코프(Andrei P. Tsygankov)는 트레닌과 달

22) Dmitri Trenin(October 2005) "Reading Russia Right," *Carnegie Endowment Policy Brief*, Special Edition, no. 42.

리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푸틴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정상적' 강대국을 지향하는 실용주의적, 지경학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전략이 프리마코프 노선에서처럼 세력균형 및 다극화나 제국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23]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푸틴의 정책이 CIS 주요 국가들을 집단적 경제 또는 안보 기구에 편입시키고 그 속에서 '비대칭적 주권(asymmetrical sovereignty)'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24]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위 견해는 이 지역에 대한 푸틴의 주된 외교적 수단이 경제 및 에너지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외지역이 러시아에게 '안보벨트'의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정치적, 군사적 수단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25] 사실 푸틴의 적극적 근외외교가 구소련과 같은 제국 건설을 지향하는가 여부는 러시아의 현재 국력을 고려할 때 크게 유의미한 문제 제기가 되지는 못한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가 필요에 따라 제반 수단을 동원한 양자간 협상을 통해 주요 CIS 국가들을 자신이 주도하는 다자적 기구에 편입시키고 있고, 이러한 적극적, 공세적 대외정책을 통해 러시아 영향력의 실질적 회복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구소련 붕괴 직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체제이행에 대한 악영향과 지역적 불안 조장을 우려하여 러시아를 자극하는 개입을 자제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국력의 쇠퇴가 명확해지면서 근외지역은 '신거대게임'의 장으로 변모되어 왔다.[26] 특히 미국은 코카서스, 카스피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

23) Andrei P. Tsygankov(2005).

24) Oleksander Pavliuk(2005) "Russia's Integration with the West and the States 'in Between'," *Russia's Engagement with the West*, Alexander J. Motyl et al. eds., pp. 194-196; Janusz Bugajski(Winter 2003-2004), p. 87; Stephen J. Blank(Winter 2002), p. 156.

25) 그러나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근외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력 행사도 당분간은 체첸 및 코카서스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Roy Allison(2001) "Russia and the New States of Eurasia," *Contemporary Russian Politics,* Archie Brown ed., Oxford: Oxford Univ. Press, pp. 451-452.

26) '신거대게임' 논의에 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고재남(2005)『트랜스 카프카즈·중앙아시아의 신거대게임과 러시아의 대응』, 정책연구 시리즈,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신범식(2005)「푸틴 러시아의 근외정책: 중층적 접근과 전략적 균형화 정책을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 제 14권, 4호, pp. 108-112.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구소련 공화국들의 독립 및 영토주권이 보호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서서히 전통적인 러시아 세력권에 침투하였다. 미국은 발틱 국가들의 나토 및 유럽연합 가입 지지에 이어 지역 내 러시아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로 구성된 GUUAM과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침투는 9/11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고, 이른바 '컬러 혁명'에 의해 친미정권들마저 CIS 역내에 등장하였다. 러시아로서는 테러와의 전쟁 와중에 미국에 세력권 일부를 허용한 셈이다.

그러나 9/11 이후 미국의 침투에 상응하여 러시아도 이 지역에 대한 개입 수준을 높여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지역 국가들로부터 군사기지 설치 등과 관련된 양보를 얻어내는 등 가시적인 이득을 얻었다.[27] 러시아는 특히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키르기즈스탄에서의 '컬러 혁명'이 러시아를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들 국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맞대응 수준을 높이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대응은 미국에 대한 본격적인 세력균형보다는 해당 국가들의 '손목을 비트는' 방식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러시아는 CIS 내 지역별로 서로 다른 정책들을 전개해 왔다. 이는 CIS 역내에서 '지정학적 다원주의' 경향이 강화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28] 러시아는 대체로 남코카서스 지역, 특히 그루지아에 대해서는 분할통치 방식을, 중앙아시아에 대해서는 안정화 정책을, 유럽과의 경계를 이루는 국가들, 즉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펼쳐 왔다고 할 수 있다.[29] 특히 후자 3국은 서방세력의 침투 방지, 러시아 세력권 회복, 중동부 유럽에 대한 견제에 가장 긴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에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벨라루스는 러시아와의 재통합 가능성이 가장 높다. 벨라루스는 사실상 러시아에 경제 및

---

27) Jeronim Perovic(2005) "From Disengagement to Active Economic Competition: Russia's Return to the South Caucasus and Central Asia," *Demokratizatsya*, vol. 13, no. 1, pp. 61-85; Martha Brill Olcott(October 2005) "The Great Powers in Central Asia," *Current History*, p. 333.

28) 신범식(2005), p. 107.

29) Michael Rywkin(2003) "Russia and the Near Abroad under Putin,"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ests*, vol. 25, pp. 3-12.

에너지 종속 상태이고 독자적인 국가 정체성도 낮은 상태이다. 양국 통합이 일종의 국가연합 형태를 취할 수도 있으나 푸틴이 2002년 8월에 제안한 바에 의하면 벨라루스가 단순히 흡수합병될 가능성도 있다.[30] 몰도바도 러시아에 대하여 무역 및 에너지 종속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부채 상환을 위해 자국의 주요 기업들을 러시아 기업에 매각하여 왔다. 더구나 몰도바에는 민족분규를 조정하는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러시아 군이 독립 이후 계속 주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이 두 나라는 사실상 러시아의 통제 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벨라루스나 몰도바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보다 서구 지향적이다.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정치, 군사 동맹을 추구해 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다만 90년대 말 쿠치마(Leonid Kuchma) 대통령이 서방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정에 깊숙이 그리고 노골적으로 개입해 왔다. 러시아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 뿐 아니라 분리주의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거나 반러시아적 정치인들을 음해하는 정치공작을 피기도 하였다. 2002년 의회선거에서 주 우크라이나 대사인 체르노미르딘(Viktor Chernomyrdin)이 친쿠치마 정당들을 지지했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친러시아적인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ich) 후보를 지원하였다. 쿠치마 정부 시기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을 단일 경제지역으로 묶으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여 여러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이른바 '오렌지 혁명' 후 유쉬첸코(Viktor Yushchenko)의 친서방 정책이 강화되자 올해 1월 공급 가스 가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가스 공급을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 제한은 우크라이나의 부채 상환 독촉이라는 명분 하에 93년과 99-2000년에도 이루어진 바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가 동부 지역 러시아인들의 분리주의를 자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커치(Kerch) 해협과 아조프(Azov) 해에 관한 영유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현재 국경을 그대로 존중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희망해 왔던 것처럼 유럽연합이나 나토 가입을 실행에 옮긴다면 이는 러시아-서방 관계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다.[31]

---

30) Janusz Bugajski(Winter 2003-2004), p. 88.

31) 90년대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서방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J. L. Black(2004) *Vladimir Putin and the New World Order: Looking East, Looking West?*

이외에도 러시아가 강력한 압박 전략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그루지아이다. 그루지아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가 코카서스 및 카스피해 그리고 이 지역의 유일한 동맹국인 아르메니아로 연결되는 통로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루지아는 미국 등 서방에 카스피해 원유를 수출할 주 공급원이다. 러시아는 그루지아로 하여금 아제르바이잔에서 터어키에 이르는, 바쿠-세이한(Baku-Ceyhan) 파이프 라인의 건설에 참여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한 바 있고, 체첸반군 소탕 명목으로 러시아 군의 진입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친미적인 사카쉬빌리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합은 더욱 가열되어 왔는데, 러시아는 그루지아 정부를 다루는 수단 중 하나로써 아프카지야, 남오세티야 분리주의를 지원해 왔다.

러시아의 근외외교 정책 수단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식은 CIS 국가들의 경제적 취약성, 대러시아 의존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부 동구 국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등 일부 CIS 국가들 뿐만 아니라 발틱 3국, 폴란드 등에 대해서까지 거의 독점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이들이 의존하는 에너지는 석유, 가스 뿐 아니라 전기까지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수입 전기의 10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지리적 요인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들에게 러시아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세계 시장가격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대체하기도 어렵다.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들은 원유의 10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 국영기업들은 에너지의 생산 뿐 아니라 정제시설, 원유수출 부두, 공급회사, 소매 판매망, 발전소 등 여타 인프라 및 공급체계까지 장악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기존의 의존도를 활용하여 각국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즉, 이들 국가들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 할 경우 에너지 공급 중단과 같은 보복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32]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에너지 생산국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러시아에 대해 의존적이다.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운송시설 및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러시아는 자원의 가격 뿐 아니라 이용가능성까지 통제할 수 있다. 그동안 러시아는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p. 247-266.

32) Keith Smith(2006) *Russian Energy Politics in the Baltics, Poland, and Ukraine: A New Stealth Imperialism?*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자국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봉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러시아는 2005년 5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바쿠-세이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사전에 막지 못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하며, 현재는 카스피해 원유를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까지 공급케 하려는 오데사-브로디(Odessa-Brody) 라인의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자국기업의 에너지 수출 시에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회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러시아 관통 루트 이용을 강요한다. 유코스 사태는 에너지 자원을 강대국화 전략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푸틴 정부의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33]

아울러 러시아는 근외 국가들의 각종 프로젝트, 사유화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러시아에 대한 채무를 에너지 관련 전략적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34] 그리고 러시아는 CIS 내에서 에너지 카르텔, 예를 들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하나로 묶는 '유라시안 가스 동맹'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일 성사될 경우 참여 에너지 생산국들의 대러시아 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들(예를 들어 Gazprom, Lukoil, Transneft, RAO UES 등)은 푸틴 대외정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이들 기업은 KGB 출신 등, 실로비키에 의해 장악되어 있고, 이들은 또 구소비에트 공화국의 비즈니스 엘리트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는 기술 및 자본력의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구소비에트 지역에서의 에너지의 생산과 흐름을 사실상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렛대들을 활용하여 러시아는 CIS 국가들과 여러 가지의 다자기구들을 출범시켰다. 러시아는 2003년 구속력이 아직 약하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단일경제지역을 조직하였다. 이와 아울러 GUUAM에 대항하는 CIS 집단안보기구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를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과 출범시켜 신속대응군 체제를

---

33)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원(2005) 「러시아 석유산업의 구조 변화와 푸틴 정부의 석유정책」, 『슬라브학보』, 제 20권, 2호, pp. 409-430; Martha Brill Olcott(October 2004) "The Energy Dimension in Russian Global Strategy: Vladimir Putin and the Geopolitics of Oil," *Paper released by The James Baker III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ice University 참조.

34) Gregory Gleason(2004) "Russian Companies Propose Debt-Equity Swaps in Central Asia," *Eurasia Daily Monitor*, vol. 1, p. 103, http:// www.jamestwon.org.

갖추었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및 중국과 함께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구성하였다(우즈베키스탄은 2001년 가입). 그리고 러시아는 키르기즈스탄 및 타지키스탄에 군사 기지를 개설하고 러시아 카스피해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필요할 경우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35]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는 서방의 침투가 가시화되고 있는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근외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가 강압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은 야당 또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러시아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러시아는 무기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국가들은 미국 등 서방의 민주화 압력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러시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기도 한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의 경우, 미국의 비판이 계속되자 GUUAM에서 탈퇴하고 푸틴과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쉽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푸틴은 근외지역에서의 헤게모니 확립이 세계적 수준에서 강대국으로 발돋음 하는 초석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다. 이러한 개입을 통하여 푸틴은 벨라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적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CIS 틀에 의한 다자주의적 통합이 러시아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뿐이라는 실용적 판단에서이다. 특히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나 '집단안보조약기구' 등을 구축하기 위하여 푸틴 정부는 양자협상과 CIS 내의 소지역주의를 적극 활용하여 왔다.[36] 그리고 그의 노선이 경제 우선 원칙을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외지역의 경우에서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전략과 지경학적 전략을 통일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

35) Jeronim Perovic(2005), p. 78.

36) 신범식(2005), pp. 113-120.

5. 결론: 푸틴 외교노선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푸틴의 외교노선은 서방과의 직접적 관계에 있어서는 순응 또는 (제한적) 협력을, 근외지역에 대해서는 압박에 의한 협력 도출이라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쇠퇴한 국력이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지향하는 '정상적' 강대국의 의미가 현대화된, 여러 강대국 중 하나로서의(예를 들어, 현대적 프랑스 정도로의) 정상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고, 또 그것을 달성하는 방식이 실용주의와 현실주의의 결합에 의한 것인 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신범식의 연구도 잘 지적하고 있듯이 푸틴 정부의 실용적 현실주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옵션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방위 외교' 노선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가장 선호하는 방향은 근외지역에 집중하는 전략이다.[37]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친서방적 전략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미국의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개입 전략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푸틴의 정상적 강대국론은 유럽 지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서의 강대국을 지향하며, 바로 이러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러시아 국가의 존립 자체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푸틴은 '전방위 외교'라는 명분 하에 사실상 모든 주요 국가들과 협력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 외교는 이중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현실주의적 판단에 의해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러시아 전방위 외교는 서로 갈등 또는 적대관계를 보이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실리추구를 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국제적 사안에 대한 양자택일적 관여(commitment)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실 푸틴 정부는 서방과 근외지역에 대해 차별적인 전략을 구사해 왔지만 대서방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측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 푸틴은 러시아를 유럽의 일원으로 규정하고 독자적 다극화를 지향하지 않으면서도 서구에로의 적극적 통합이나 러시아 정체성의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푸틴은 미국과 유럽, 구유럽과 신유럽 사이의 균열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거

---

37) 신범식(2003) 「유라시아 지정학적 환경변화와 러시아의 대응: 지전략의 복합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3집, 3호, pp. 295-323.

나 활용하지는 않았다. 푸틴의 이라크 전쟁 반대는 다극화 원칙보다는 실리추구 의도가 더 강한 것이었고, 막상 전쟁 종결 직후에는 신유럽 및 미국과의 관계복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미국과 유럽, 구유럽과 신유럽 사이에서 등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러시아는 반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면서도 국지적 경쟁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토 회원국 및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정학적 관점에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을 활용하여 나토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에서 대결과 고립을 회피하고 러시아의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범위 내에서 실용적 협력정책을 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러시아-서방 협력관계는 근외지역에서의 경합양상에 따라 손상될 수 있다. 즉, 러시아가 근외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추구할수록 러시아-서방 관계는 정체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국가들은 푸틴 정권의 권위주의로의 회귀, 근외지역 국가들의 주권 또는 내정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에 비판적이다. 특히 서방은 CIS 지역 에너지 자원에 대해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38] 이미 지난 1월 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제한 사태는 그동안 중동과 달리 신뢰할만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선전되어 온 러시아의 국제적 평판에 악영향을 미친 바 있다. 더구나 이번 사태가 올해 G-8 의장국으로서 푸틴이 에너지 협력 문제를 핵심의제로 하겠다고 공언한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서방의 파트너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신뢰하락은 불가피하다. 궁극적으로는, 서방과는 다른 정치적 가치를 지향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규모도 포르투갈 정도인 러시아를 왜 G-8의 일원으로 대우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우크라이나, 오세티아, 아프카지아 등에서 가장 노골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헤게모니 추구가 러시아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서방과의 협력 필요성과 충돌할 개연성은 상존한다.

러시아 실리추구 외교의 한계는 이미 이라크 사태에서도 잘 나타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딜레마는 러시아의 근외지역 외교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이란 문제에서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란은 이 지역에서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데 러시아와 동일한 이해를 지니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가 서방과 협력하여 압박을 가할 경우 러시아에 대해 상당한 정치적,

38) 유럽의 중앙 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경제적 관심에 관해서는 Jernim Perovic(2005), p. 85, 주) 65 참조.

경제적 보복을 할 수 있고, 특히 러시아 남부의 근외지역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39] 푸틴 정부도 이란 핵 시설 건설 참여를 중단할 의사가 없으며, 그 대신 러시아 영토 내에서의 핵 농축 및 사용된 우라늄의 러시아에로의 반환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 이러한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고 미국 등 서방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에 러시아가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푸틴 정부는 IAEA 사찰 및 유엔 안보리 회부 문제에 있어서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나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도 이러한 이중적 행보를 계속 견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푸틴이 고어-체르노미르딘 협약을 파기한 바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러시아의 양보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당분간 이란 문제는 러시아가 미국 및 서방의 압력으로부터 얼마나 독자적으로 실리추구 외교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이중적 외교노선은 임기 말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용적 현실주의가 푸틴 정권의 권력기반인 애국주의와 자유주의 세력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른 한편, 서방국가들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는 확대된 유럽연합의 운영, 중동 문제, 중국 견제 등에 놓여져 있다. 부시 행정부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푸틴 정권의 성격을 대외정책의 주요 변수로 간주하지 않아 왔고, 자유와 민주주의 수출을 강조하고 있는 집권 2기에

---

39) Robert O. Freedman(2002) "Putin and the Middle East," *Demokratizatsiya*, vol 10, no. 4, pp. 509-527. 이란은 카스피해 개발 지분 문제와 관련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경제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군사 정치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란은 타지키스탄에서의 휴전 유지, 아프간 북부동맹 지원, 아제르바이잔과 갈등관계에 있는 아르메니아 지지, 바쿠-세이한 파이프라인 반대, 미국 일방주의 비판 등, 중동에서 사실상 러시아의 동맹 역할을 해 왔다. 이란은 그동안 체첸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를 비판하는 것도 삼가왔으며 최근에는 양국 무슬림 간의 교류도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란의 주 무기 공급원으로서 초음속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을 판매해 왔다. 미국은 이란이 러시아제 무기들을 사용하여 페르시아만, 인도양의 미국함대와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 우방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고 우려해 왔다. 러시아는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이 경제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쉐르(Bushehr) 원전 이외의 핵 시설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 군수산업과 특히 원자력 산업은 러시아-이란 관계를 산업 전체의 생사가 걸린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들어서도 러시아를 그 대상 국가군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다. 서방은 푸틴 정부의 독재화 및 근외지역에서의 헤게모니 추구를 묵인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의 군사 및 에너지 협력을 얻으려는 '파우스트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다.[40]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와 개별적으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로서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공동대응 전략이 없으며, 근외지역에서의 '컬러혁명'도 정체 또는 퇴조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등 서방의 대러시아 정책 수단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9/11 이후 미국 등 서방의 대러시아 정책이 '온화한 무시(benign neglect)' 경향을 보이거나 표류하는 상황이다. 러시아 엘리트층도 그동안 서방에 대한 협조에도 불구하고 별 보상이 없었다는 불만으로부터 이제는 현상유지(status quo)를 원하고 있다.[41] 이러한 현상유지가 지속될 수만 있다면 푸틴의 실용적 현실주의는 러시아 역사에 있어서 또 다른 '숨쉴 공간(breathing space)'을 확보해 주는 것일 수 있다.

---

40) Lilia Shevtsova(2003) *Putin's Russia*,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p. 263-266.

41) Michael McFaul(October 2005) "Russia and the West: A Dangerous Drift," *Current History*, vol. 104, no. 684, pp. 307-312; Herman Pirchner(2003) "With or Against the West: Russia's Debate Continues," *Demokratizatsya*, vol. 11, no. 1, pp. 51-54.

참고문헌

강봉구(2005) 「편승과 균형: 21세기 세계정치와 러-미 관계」,『국제정치논총』, 제45집, 3호, pp. 263-285.

고재남(2005) 『트랜스 카프카즈 · 중앙아시아의 신거대게임과 러시아의 대응』, 정책연구시리즈,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고상두(2005) 「푸틴의 전방위 외교정책: 제국증후군의 극복」,『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1호, pp. 347-364.

신범식(2003) 「유라시아 지정학적 환경변화와 러시아의 대응: 지전략의 복합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pp. 295-323.

_____(2005) 「푸틴 러시아의 근외정책: 중층적 접근과 전략적 균형화 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 14권, 4호, pp. 103-139.

홍성원(2005) 「러시아 석유산업의 구조 변화와 푸틴 정부의 석유정책」, 『슬라브학보』, 제 20권, 2호, pp. 409-430.

Allison, Roy(2001) "Russia and the New States of Eurasia," *Contemporary Russian Politics,* Archie Brown ed., Oxford: Oxford Univ. Press, 2001.

Black, J. L.(2004) *Vladimir Putin and the New World Order: Looking East, Looking West?*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Blank, Stephen J.(Winter 2002) "Putin's Twelve-Step Program,"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5, no. 1, pp. 147-160.

Bugajski, Janusz(Winter 2003-2004) "Russia's New Europe," *National Interests,* vol. 74, pp. 84-91.

Burkin, A. I., Vozzhenikov, A. V. & Sineok, N. V.(2005) *Natsional'naja bezopasnost' Rossii,* Moskva: Izdatel'stvo RAGS.

Clement-Noguier, Sophia(2005) "Russia, the European Union, and NATO after September 11: Challenges and Limits of a New Entanglement," *Russia's Engagement with the West: Transformation and Integr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Alexander J. Motyl et al. eds., Armonk: M. E. Sharpe Inc.

Freedman, Robert O.(Fall 2002) "Putin and the Middle East," *Demokratizatsiya,* vol 10, no. 4, pp. 509-527.

Gleason, Gregory(2004) "Russian Companies Propose Debt-Equity Swaps in Central Asia," *Eurasia Daily Monitor*, vol. 1, no. 103, http://www.jamestown.org.

Goldgeier, James M., & McFaul, Michael(2003) *Power and Purpose: US Policy toward Russia after the Cold Wa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Hanson, Philip(2005) "Making a Good Entrance: Russia's Reengagement with the World Economy and, Unfortunately, with Europe in Particular," *Russia's Engagement with the West: Transformation and Integr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Alexander J. Motyl et al. eds., Armonk: M .E. Sharpe Inc.

Ivanov, Igor S.(2002) *The New Russian Diplomacy,* Washington, D.C.: The Nixon Center and Brookings Institution Press.

Jackson, William D.(2002) "Encircled Again: Russia's Military Assesses Threats in a Post-Soviet World,"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7, no. 3, pp. 373-400.

Kassianova, Alla(2001) "Russia: Still Open to the West? Evolution of the State Identity in the Foreign Policy and Security Discourse," *Europe-Asia Studies*, vol. 53, no. 6, pp. 821-839.

Katz, Mark N.(2003) "Losing Balance: Russian Foreign Policy toward Iraq and Iran," *Current History*, vol. 102, no. 666, pp. 341-345.

_____(2004) "Exploiting Rivalries: Putin's Foreign Policy," *Current History,* vol. 103, no. 675, pp. 337-341.

Levgold, Robert(Winter 2003) "All the Way: Crafting a US-Russian Alliance," *The National Interest*, vol. 70, pp. 21-31.

Light, Margot(2003) "In Search of an Identity: Russian Foreign Policy and the End of Ideology,"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vol. 19, no. 3, pp. 42-59.

Lo, Bobo(2003) *Vladimir Putin and the Evolution of Russian Foreign Policy,* London: Blackwell Publishers.

Lynch, Allen C.(2001) "The Realism of Russia's Foreign Policy," *Europe-Asia Studies*, vol. 53, no. 1, pp. 7-31.

McFaul, Michael(2005) "Russia and the West: A Dangerous Drift," *Current*

History, vol. 104, no. 684, pp. 307-312.

Olcott, Martha Brill(2004) "The Energy Dimension in Russian Global Strategy: Vladimir Putin and the Geopolitics of Oil," *Paper Released by the Baker III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ice University.

_____(2005) "The Great Powers in Central Asia," *Current History,* vol. 104, no. 684, pp. 331-335.

Pavliuk, Oleksander(2005) "Russia's Integration with the West and the States 'in Between'," *Russia's Engagement with the West.* Alexander J. Motyl et al. eds.

Perovic, Jeronim(2005) "From Disengagement to Active Economic Competition: Russia's Return to the South Caucasus and Central Asia," *Demokratizatsya,* vol. 13, no. 1, pp. 61-85.

Pirchner, Herman(2003) "With or Against the West: Russia's Debate Continues," *Demokratizatsya,* vol. 11, no. 1, pp. 51-54.

Putin, Vladimir(2003. 5. 16) "Poslanije Prezidenta Federal'nomu Sobraniju Rossijskoj Federatsii," http://president.kremlin.ru.

Rywkin, Michael(2003) "Russia and the Near Abroad under Putin,"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ests,* vol. 25, pp. 3-12.

Sakwa, Richard(2004) *Putin: Russia's Choice,* London: Routeledge.

Shevtsova, Lilia(2003) *Putin's Russia,*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mith, Keith(2006) *Russian Energy Politics in the Baltics, Poland, and Ukraine: A New Stealth Imperialism?*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ovet po vneshnej i oboronnoi politike(1998) "Strategija Rossii v XXI veke: analiz situatsii i nekotorye predlozhenija," http://www.svop.ru.

Stent, Angela E.(2005) "America and Russia: Paradoxes of Partnership," *Russia's Engagement with the West,* Alexander J. Motyl et al. eds.

Surovell, Jeffrey(2005) "Yevgenii Primakov: 'Hard-Liner' or Casualty of the Conventional Wisdom?"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vol. 21, no. 2, pp. 223-247.

Trenin, Dmitri(2001) *The End of Eurasia: Russia on the Border between*

Geopolitics and Globalization, Moscow: Carnegie Moscow Center.

_____(2005) "Reading Russia Right," *Carnegie Endowment Policy Brief*, no. 42, Special Edition.

Tsygankov, Andrei P.(2005) "Vladimir Putin's Vision of Russia as a Normal Great Power," *Post-Soviet Affairs*, vol. 21, no. 2, pp. 132-158.

Wallander, Celeste A.(2003) "US-Russian Relations: Between Realism and Reality," *Current History*, vol. 102, no. 666, pp. 307-312.

Abstract

Putin's Foreign Policy: Dualism of Pragmatic Realism

Leem, Kyung-Hoon

This paper criticizes dichotomous conceptualizations of Putin's foreign policy either as pro-western or as imperialist one. Instead it argues that Putin's policy combines these two orientations as a pragmatic way to recover Russia's status as a great power at global as well as regional level. Unlike his predecessor, Putin has abandoned the rhetoric of balance of power and multi-polarity. He chose to actively cultivate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West including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after 9/11. His choice is based on the realist judgment about the Russia's power dramatically declined since the end of the Soviet Union. At the same time, on the other hand, Putin has aggressively pursued hegemony in the Near Abroad by mobilizing not only economic but also political and military leverages, which has been quite successful in recovering Russia's influence over the region. But it may conflict with the goal of cooperation with the West which is necessary to modernize the Russian economy. Nevertheless Putin is likely to keep the current policy line; the West lacks common strategy and policy instruments to effectively pressure Russia; the Russian elites prefer the status quo. Putin's pragmatic realism may bring another "breathing space" in Russian history.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6. 3. 12
논문심사일: 2006. 3. 18 ~2006. 4. 15
심사완료일: 2006. 4. 19